

韓-브라질 정상회담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경제·정치 등 협력 강화

‘韓-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농업 등 10개 분야 MOU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또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

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의 경제협력체다. 양국 정상 모두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

했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 MOU'로 대기업 중심의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K-화장품의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MOU 3건을 체결했다.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우주, 방산, 항공 분야의 지평 확대를 언급하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와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룰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외에도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통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공조도 약속했다.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과, 기본사회를 토대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한 양국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농기계·농약 수출길 넓힌다

(농식품부)

파바로 브라질 농업장관 면담
식량안보·교역 활성화 등 합의

한국과 브라질 농업장관이 만나 식량안보 협력·농기자재 교역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서는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비롯해 식량안보, 농기자재 수출 확대 등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 상태였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협력위에서 식량안보와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투자 및 동식물 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협력위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장관 면담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

라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K-푸드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또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 관련해, 재정비된 협력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미령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의 심사 기간이 길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속한 검토 및 심사기간 단축'을 상대국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에서 카를로스 엔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주하고 있다. /농식품부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강국 브라질과 실질 협

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성기학 영원 회장 검찰고발... "대기업 지정 회피"

가족 소유 계열사 등 82곳 신고 누락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영원의 성기학 회장이 자신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소속회사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 제출시, 영원이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 및 친족(혈족 14촌) 회사 43곳, 임원 회사 39곳 등 총 82곳(중복 제외)을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곳, 2022년 74곳, 2023년 60곳이다.

특히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슝툼을 비롯해 자녀·남동생·조카 소유 회

사까지 소속회사에서 빠뜨렸다. 일부는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소속 계열사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간 지정에서 제외됐다. 2024년에서야 공시집단으로 첫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영원은 공시집단 지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소속 87개사가 이 기간 규제를 받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통상 먼 친척이나 임원 회사가 누락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인이 100% 보유한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딸 소유 회사 중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까지 빠뜨린 점에서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기준으로 영원은 2021년 5

월 계열사 5곳, 자산 3조161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누락 자산 2조5800억원을 합하면 실제 자산은 5조7417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합산 6조2419억원, 2023년에는 6조38863억원으로 각각 5조원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누락 82개사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을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美 관세 대응체계 가동... "우호적 협의"

산업부 김정관 장관 민관합동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미 I E E P 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 E E P 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경부·외교부·농식품부·기후부·복지부·중기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미측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협약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 등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